

## 제 2 장

---

국제정세 및  
한반도 주변정세



## 제 1 절 1995년도 국제정세 일반

이념적 대립에 의한 전후냉전시대의 질서가 와해된 이후로 국제정세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양상이 1995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걸프전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 미국은 냉전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제질서의 창출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갔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의 대외정책이 뚜렷한 공동의 이념이나 목표가 없이 주로 국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냉전 이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분쟁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각국이 대외정책에 있어 이념적 요소를 탈색시킨 채 자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실리 추구의 경향을 점차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핵화산 문제 및 무역관계 등을 둘러싼 마찰이 표면화되는 등 과도기 상태의 특징들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995년 한 해 동안 세계는 중동평화의 진전, 보스니아 평화협정의 체결, 미·베트남 외교관계 회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화해 기류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보다 안정된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5년 9월 미국의 중재아래 2단계 자치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요르단 강 서안에서의 이스라엘군의 철수,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 실시 등에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중동평화 협상의 진전은

협상의 주역이었던 Rabin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됨으로써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기도 하였지만, Peres 총리 체제로 바뀐 이스라엘 정부는 전임 총리의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우는 발칸반도에서 2차대전이후 죄악의 유혈분쟁으로까지 발전되었던 보스니아 민족분규는 내전 당사국 정상들이 1995년 11월 미국 Dayton에서 평화협정에 조인한 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12월 파리에서 공식서명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1992년 4월 본격적인 내전에 휩싸인 아래 약 3년 반동안 25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전세계인들에게 ‘인종 청소’의 악몽을 안겨주었던 보스니아 사태의 해결은 약 6만명의 병력을 투입한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1995년에도 북한의 불안한 동향과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등 지역 정세 안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1995년 7월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하였으며, 1995년 8월 미국과 베트남간의 외교관계가 재개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 지역 국가들간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특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역내의 상호 의존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이것이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미·소간의 이념적, 군사적 대립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대결과 협력의 양면을 보여 주었다. 1995년 6월 모교 방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을 방문하려는 리펑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에게 미국이 입국 비자를 발급하자 중국은 이를 미국이 ‘2개의 중국정책’을 모색하고 나선 것으로 판단하여 강도높은 대미 비난성명 발표와 함께 주미대사 소환,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등으로 강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양안문제외에도 미국과 중국은 통상문제, 핵실험 및 미사일 수출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어 왔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내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간의 갈등관계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중국 시장에의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과의 대립을 지속할 수 없는 입장의 미국과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 및 WTO 가입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중국이 1995년 8월 미·중 외무장관 회담 및 10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다시 협력관계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편 냉전 종식과 함께 퇴조해 갔던 동유럽 지역의 구 공산세력이 일부 국가에서 다시 부상하였다. 1995년 7월의 아르메니아, 10월의 크로아티아 총선에서 모두 구 공산세력이 승리하였으며, 12월 러시아 총선에서도 공산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상을 획득하면서 제1당으로 발돋움하여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부활에 따른 이념적, 군사적 대립의 재개를 우려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념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구공산권 국가들의 경제개혁 및 민주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과 좌절감이 표출된 데 기인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5년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던 해였다. 특히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이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은 1995년 4월 개최된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 및 연장회의'에서 NPT 조약의 무기 한 연장 결정을 도출하게 만들었다. 프랑스와 중국이 잇달아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국내외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NPT 조약의 무기한 연장 결정에 힘입어 1996년내에 포괄적 핵실험금지 협약(CTBT)을 체결하여 핵확산방지 체제를 한층 공고히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 진행되었다. 한편,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선언으로 표면화된 북한 핵문제는 긴밀한 국제적 공조아래 점차 해결을 위한 이행기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안정된 국제질서를 확보하지 못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유엔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역할에 대한 높아진 기대는 계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엔도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평화유지활동 (PKO) 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말리아 및 보스니아 사태와 관련해 나타난 유엔 역할의 한계성 노정과 함께 유엔의 역할 강화 요구가 더욱 높아졌으며, 그 결과 유엔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유엔 특별정상회의를 비롯해 유엔의 역할 강화를 위한 많은 국제회의들이 개최되었다. 특히, 환경, 미약, 테러리즘, 난민, 빙곤, 인구, 인권 등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범세계적인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의 생존 환경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정치의 다극화 추세에 따른 정치, 안보면의 지역적 접근 노력이 1995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미국, 러시아 등 군사 초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점차 퇴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지역별 안보협력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기존의 지역안보협력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지역안보협력체 구성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아·태 Round Table 회의, 아·태 안보협력이사회 (CSCAP), 동북아협력대화 (NEACD) 등 정부 및 비정부 차원의 안보협력 논의와 동북아다자안보대화 (NEASED) 추진 노력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5년 12월 미국과 구주연합 (EU) 이 신대서양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범대서양 정치·경제 협력을 한 차원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동안 대화의 채널을 갖지 못했던 유럽과 아시아도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의

개최를 준비함으로써 지금까지 주로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지역협력이 보다 범위를 확장해 지역간 협력으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변화를 보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5년중 세계 경제는 멕시코 폐소화 위기, 베어링 은행 금융사고, 일본 금융기관의 도산, 달러화 급등락, 유럽통화제도(EMS)의 동요 등으로 국제금융 부문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3.7%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성장은 미국 및 EU등 선진국 경제가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가들을 중심으로한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성장을 이룩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개도국 경제의 경우, 멕시코 폐소화 위기의 충격으로 중남미 국가의 성장률은 크게 낮아졌지만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이 8%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여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오늘의 세계 경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북미, EU, 동아시아 3극체제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의 혁명적 발달에 따른 상호 의존관계의 심화로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제2차 대전이후 지난 47년간 국제무역 질서의 근간이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날로 첨예화되는 국가간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세계 무역의 자유화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첫해에 WTO는 특히 주요 교역국들의 무역 정책 및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개도국과 시장경제체제 전환국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확대 등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발전과

함께 아·태 경제협력체 (APEC), 구주연합 (EU),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등 기존의 지역 경제협력체제가 보다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경제협력체들이 베타적 경제블럭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는 WTO를 축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와 인접국간의 상호보완성을 이용하기 위한 지역주의체제가 공존하는 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제 2 절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1. 1995년도 동북아 정세의 특징

역동적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이른바 '신3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간의 상호 갈등과 협력의 교차에 따라 변화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으며, 대만문제와 북한 핵문제로 인해 긴장 관계가 계속되었다. 특히 1995년 6월 리명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해 중국이 주미대사 소환 및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실시 등으로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양안관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중간의 갈등은 양국이 외무장관 회담 및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감에 따라 상당히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련 견제라는 과거 공통의 전략목표를 대신할 수 있는 양국간의 새롭고 안정된 행동양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 등을 통해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김일성 사망 이후 체제 위기의 타개를 위해 남북 관계를 계속 경색시키는 이중성을 보여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지속시

겼다. 특히 최근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구조적인 식량문제를 겪고 있던 상황에서 1995년 여름의 홍수피해가 가져온 식량난은 북한 체제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으며, 이러한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북한의 행동양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하시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군사적 모험주의의 발생을 우려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과거 냉전시대의 이념적, 군사적 대립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 지역 주요 국가들에게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통상압력을 한층 강하게 가해 옴에 따라 발생한 무역분쟁 또한 동북아 지역 정세 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5년 2월에는 미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대립하였으며, 일본 역시 미국과의 1995년 6월 자동차 협상에서 양국간의 갈등을 노정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마찰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이 지역의 주요 경제세력들의 산업 구조가 모두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향후에도 이러한 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국내정치적 불안 요인도 동북아 지역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함으로써 Clinton 행정부는 대외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중국 역시 시장주의적 경제요소 도입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1993년 7월 자민당 정권의 붕괴 이후 계속적으로 정당간의 이합집산에 의한 단기 내각들이 출현하여 일관성 있는 대내외 정책수립 및 추진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특히 러시아는 1995년 초 체첸사태에 대한 무력개입, Yeltsin 대통령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Yeltsin 정부에 대한 지지 하락이 1995년 12월 러시아 총선에서 공산당의 승리로 이어져 1996년 6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담이 더욱 증폭되었다. 여기에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아직까지도 후계 체제를 공식

적으로 출범시키지 못하는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을 노출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 및 발전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해 나감에 따라 각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도 보다 심화되어 갔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 정세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1995년 2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한 Clinton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R)’ 발표 역시 보다 안정적인 동북아 지역 질서 창설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대동아시아 참여정책은 세계 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급증함에 따라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부문에서 전면적인 참여정책을 펴 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4년 10월의 미·북 제네바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던 북한 핵문제가 1995년 6월 쿠알라룸푸르 미·북간 합의 및 12월의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문제 해결의 단계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전체의 정세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5년 12월에는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이 두만강지역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협의위원회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투자이행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성과가 거두어지기도 하였다.

쌍무적 안보동맹체제가 퇴조하고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형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상은 지금의 동북아 질서를 과거 냉전체제하에서의 동북아 질서와 구분지어 주는 특징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 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

고 새롭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국가간의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논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접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따라 앞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냉전체제 와해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보이면서도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안보 위협 감소와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협력 분위기가 성숙되는 등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지역 질서의 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인 질서가 형성되기까지는 미국의 중심적 역할에 의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세력균형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균형은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일본과,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군사 강대국으로 이 지역의 안보환경을 좌우했던 러시아 역시 점차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 2. 주요 국가의 동북아 정책 기조

미국 Clinton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북한 체제의 불안,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 가능성 등 냉전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안보 위해요인에 대응하고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높은 비중을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Clinton 행정부는 1995년 2월 과거 Bush 행정부가 2,000년까지 동아시아 주둔 미군 병력의 3단계 감축을 확정했던 동아시아 전략을 폐기시키고, 주한 미군을 포함한 약 10만명의 병력을 앞으로 상당기간 이

지역에 주둔시킨다는 내용의 일명 '동아시아 전략보고서 (EASR)'를 발표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미국의 경제력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Clinton 행정부가 세계 경제의 기축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처럼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세력균형자 역할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인 세력균형 체제를 유지하여 이 지역의 안보환경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한·미, 미·일간의 기존의 양자간 안보체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내에 미국의 전진기지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아·태 지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에 참여하려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군사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이 지역 안보에 대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유도해 가고 있다. 일본 역시 북한의 핵개발과 식량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혼란, 중국과 대만의 갈등 등으로 냉전시대보다 더욱 불안정해진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는 일본 헌법 등의 제도적 제약은 물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비군사적 부분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간의 안보협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미국이 계속 통상압력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양국간의 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마찰은 앞으로도 양국간 최대의 외교현안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냉전이후 미·소간의 경쟁이 소멸되고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국제관계를 주도하게 되자 '일국 패권주의'라는 시각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려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미 견제는 1995년 6월 미국 정부의 리펑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을 계기로 촉발된 미·중 간의 갈등에서 표면화되었으며, 상호간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중국의 핵실험 실시, 파키스탄 및 이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부품 판매, 인권 문제, 무역분쟁 등을 둘러싼 심각한 마찰로 인해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의 무제한적인 갈등과 경쟁이 서로의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경제적 이익 등 자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국간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1995년 11월 오사카 APEC 정상회담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 조치를 발표하는 등 대미 협력 정책을 취한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 가속화와 WTO 가입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필요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같이 미·중 양국간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 강화가 미국의 패권 추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에서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일본은 차관공여 조정 등의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 중국을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일간의 기존 안보체제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본의 독자적 군사전략을 통한 군사대국화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현상유지정책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미·북간 합의 및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를 지지하는 등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경제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북한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한편,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방한을 꾸준히 증가시킴으로써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구소련방 해체 후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독립국가연합(CIS) 구성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대아시아 외교의 관심도 동북아 지역보다 우즈베키스탄 등 5개의 독립국가연합 구성국이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의 유지'를 러시아 외교의 우선 과제로 삼고 과거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남북한을 최초로 교차승인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의 혼란과 한·러 관계의 긴밀화에 따른 러·북관계의 악화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의식하여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한편, 한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실리주의적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체첸사태의 확대,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 총선에서의 공산당 승리 등 산적한 국내문제로 인해 동북아 및 한반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은 많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3. 북한 정세

#### 가. 대내정세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북한은 권력의 구심점 약화, 심각한 경제난, 외교적 고립 등으로 위기국면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1995년에도 이와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북한 경제는 1990년 이후 5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다 1995년의 수재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 권력자인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으로 공석이 된 국가주석직과 당 총비서직에 공식 취임하지 않고 국방위원장 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처럼 북한이 공식적인 최고지도자없이 면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승계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김일성 유훈통치'를 내세워 기존정책을 유지하면서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강화해 왔으며, 신년사를 대신한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김일성 사망 1주기 추모대회, 북한 정권 창건 47주년 및 당창건 50주년 기념행사 등을 통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단결과 충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김정일을 '오늘의 위대한 수령'으로 부르면서 상징 조작을 도모하는가 하면, 김일성은 곧 김정일이며, 김정일이 곧 노동당이라고 강조하여 김정일에 대한 절대 충성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정일은 당창건 50주년을 맞아 국방위원장 및 최고사령관 명의로 오진우 사망후 공석중인 인민무력부장에 죄광을 임명하는 등 대규모 군부인사를 단행하여 군부장악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경제전략의 기조로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고 정권의 정통성 확보 및 안정화에 주력하였으나,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중공업 편중의 경제

구조, 생산력 저하 현상 등 구조적 문제점에 흥수까지 겹쳐 만성적인 경제난 해소에 실패하였다.

북한은 주체사상 강조를 통한 체제 유지와 개방·개혁을 통한 경제난 국극복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실현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한적이며 선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나. 대외관계

대외정책 부문에서도 북한은 기존노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체제유지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미, 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기존 우호관계 회복을 도모하였다.

북한은 대외적 중심고리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판단하에 미·북 제네바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합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확보, 연락사무소 개설 등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수교를 이끌어 내 체제유지를 보장받으려고 시도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94. 10. 21) 및 경수로 지원 문제와 관련한 쿠알라룸푸르 합의(95. 6. 13)를 계기로 합의사항의 구체적 협의를 위한 일련의 회담을 진행하여 1995년 12월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군사력 우위 유지,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보 등을 겨냥해 소위 새로운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위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계속 요구하면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기도하였다.

일본과는 조기 국교수립 목표 아래 국교정상화 회담의 재개를 계속해서

촉구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어 침체된 경제난을 타개하려고 시도하는 등 대일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북한은 1995년 3월 30일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연립 3당 대표단과 일·북 국교정상화 추진 회담 재개에 합의하였으며, 극심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1995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쌀 50만톤을 지원받는 데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우리와의 국교수립으로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중국과의 친선유대 및 협력관계 강화를 시도하였다. 양국은 당·정·사회단체 대표단을 빈번하게 교환하였으며, 김정일과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중국 정권 창건 46돌(95. 10. 1) 및 북한 노동당 창건 50돌(95. 10. 10) 등을 계기로 상호 축전 교환을 통해 쌍방간의 친선 유대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북한은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을 추구하였는데, 러시아의 Yeltsin 대통령은 1995년 8월 15일 해방 50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일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쌍방간 선린우호관계 강화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5년 9월 7일 '러·북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의 연장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러·북관계를 군사적 동맹 관계에서 일반적 국가관계로 새롭게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북한은 기존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 원칙을 계속하면서 김정일 체제의 당면과제인 체제 안정, 심각한 경제난 타개 및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실용주의 노선을 병행하여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 3 절 지역별 정세

### 1. 아시아 · 태평양지역

#### 가. 일 본

##### 1) 개 관

1995년의 일본 정국은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과 소위 무당파(無黨派) 현상의 대두로 자민, 사회, 사끼가께 연립 3당이 4월의 통일지방선거 및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부진한 결과를 면치 못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3당간 정책노선의 차이를 비교적 원만하게 극복하여 기본적으로는 안정된 기조를 유지하였다.

1994년 6월 출범한 무라야마(村山) 연립정권은 지난 40여년간 정책노선을 달리하여 온 자민당과 사회당이 연합하였던만큼 내재적인 한계는 있고 있었지만 자민당으로서는 당분간 단독집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유지를 위해 사회당과의 연대를 중시할 수 밖에 없고, 사회당으로서도 당세의 회복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권에의 참여를 필요로 하여 연립정권의 존속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됨으로써 정국의 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 일본은 주요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 사회에

의 기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1995년 11월 오사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APEC 정상회담을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아·태지역내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적으로는 1991년 이래의 침체 국면이 1995년 1월 고베(神戸) 대지진 및 엉고(高) 현상으로 1995년중에도 계속되었으나, 연말부터 엉고현상의 완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 등으로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2) 국내 정세

1995년의 일본 정국은 연립여당과 야당세력이 결성(94. 12) 한 통합야당인 신진당간의 대결구도가 침예화되는 가운데 연립여당내에서도 무라야마(村山) 총리의 사회당과 자민당이 정국 운영과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대립과 타협을 거듭하였다.

무라야마 내각은 ‘부드러운 국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표방하면서 규제 완화, 지방분권 확대, 특수법인 통·폐합 등 행정 및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자민당 단독정권 당시의 노선을 답습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자민당은 1993년 8월 당내 일부세력(소위 오자와(小澤) 그룹)의 미야자와(宮澤) 총리 불신임 결의안 동조로 단독정권이 종식되고 호소카와(細川) 연립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38년만에 야당으로 전락하는 시련기를 겪은 후, 1994년 6월 사회당과의 연립을 통해 여당의 지위를 회복한 만큼 정권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사회당과 정국운영에 있어 조화와 타협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회당 또한 자민당과의 연립유지에 우선 순위를 두어 자위대의 합헌성과 미·일 안보조약을 인정하는 등 종래의 노선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1995년 1월 발생한 고베(神戸) 지역 대지진에의 대응, 특히

초동 대응을 둘러싸고 무라야마 내각의 위기관리 능력이 비판을 받았으며, 1995년 4월 실시된 통일지방선거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과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무당파(無黨派) 현상을 초래하여 동경도와 오오사카부 지사에 연예인 출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7월 23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의 패배 및 자민당의 부진으로 이어진 반면, 조직적 지지기반을 보유한 신진당은 신장세를 시현함으로써 사회당내에서 무라야마 당수 등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으며, 자민당의 9월 총재선거에서 코오노(河野) 총재가 재선에 실패하고 하시모또(橋本) 통산상이 선출되었다.

한편, 1995년도 후반기에는 주택금융전문회사의 부실채권 구제를 위한 6,850억엔 지원 여부로 여·야간 대립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5년 3월 옴진리교 독가스 사건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종교법인법 개정안이 1995년 12월 성립되었으며, 신진당에서는 카이후(海部) 당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12월 28일 실시된 당수선거에서 오자와(小澤) 간사장이 하타(羽田) 부당수를 물리치고 당수로 선출되었다.

1995년중 일본 경제는 거품경제 붕괴에 따른 후유증에 연초 고베지역의 지진과 엉고(高) 등이 겹쳐 경기의 침체현상이 계속되고,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문제가 심각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으나, 연말부터 엉고의 완화, 정부 경기대책의 효과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1991년이래 제로성장을 보여왔던 국내총생산(GDP)이 0.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일본 정부는 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9월 내수확대책 등이 포함된 총 사업규모 14.2조엔의 '경제대책' 실시를 결정하였고, 11월에는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활력있는 경제사회의 창조', '풍요롭고 안심할 수 있는 경제·사회의 창조', '지구사회에의 참여' 등 3가지를 주요 목표로 한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사회 계획"을

마련하였다.

일본 국내에서는 앞으로 일본 경제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의 시행이외에도 금융불량채권의 조기 처리(약 40조엔으로 추정)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 재정적자 축소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안정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고(高) 코스트 구조 시정, 경쟁촉진 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계속 증가되어 온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급격한 엉고로 1994년 1,209억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1995년에는 1,10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의 대GDP 비율도 1992년 3.2%에서 1994년 2.8%, 1995년에는 2.3%를 기록하였다. 환시세는 1995년 연중 엉고 추세가 계속되었으나(평균 1달러당 95엔), 연말부터 점차 약세로 반전하여 1996년에는 100~105엔대에서 안정을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3) 대외관계

1995년은 일본이 국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한 해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유엔 50주년인 1995년 중 안보리 개혁의 기본방향에 관한 회원국간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하면서 안보리 진출을 위한 정치작업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예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중동평화협상, 보스니아 사태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지역협력에 있어서는 1995년 11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APEC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APEC을 'Vision의 단계'로부터 '행동의 단계'로 이끌어 올린 「오사카 행동계획」의 챕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지역안보 협의체제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양자관계에 있어서는 미국과 1995년 1월 및 6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안보, 지역협력, 국민교류 등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양국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확인하였다. 1995년 9월 오끼나와에서 발생한 미군 병사에 의한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미군 기지 축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대두되었으나, 양국은 11월 오사카 APEC 회의시 무라야마 총리와 Gore 부통령(당초 Clinton 대통령이 방일 예정이었으나 국내사정으로 무산됨) 간의 회담을 통해 양국간 안보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오끼나와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을 검토해 나갈 '특별행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통상분야에서는 1995년 6월 최대 현안인 자동차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7월에는 항공협상이 타결되었다.

중국과는 1995년 5월 무라야마 총리, 12월 코오노(河野) 외상의 방중, 중국측으로부터 11월 양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방일이 이루어지는 등 고위인사의 교류와 함께 문화 교류, 청소년 교류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핵실험 실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1995년도 대중 무상원조 동결원칙을 견지하였으며, 중국측도 종전 50주년을 계기로 과거 역사인식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양국관계의 어려운 일면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와 최대 현안인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며, 1995년 3월 Kozyrev 외무장관 방일에 대한 코오노 외상의 답방도 1996년으로 넘겨지는 등 소강상태가 계속되었다.

#### 4)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95년은 무라야마 총리의 '한·일합방 법적유효' 발언으로 야기된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양국관계가 경색되는 어려운 국면을 겪기도 했으나 한·일 양국은 상호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하에 이러한

문제들을 발전적으로 극복하면서 우호협력 분위기를 회복하였다.

1995년 양국간 인적교류는 285만명, 총 교역액은 496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두 차례의 정상회담(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시, 11월 오사카 APEC 정상 회의시)과 4차례의 외무장관회담(2월, 8월, 9월 및 11월)을 개최하였다.

### 5) 북한과의 관계

1995년 3월 와타나베 미치오(渡邊 美智雄) 전 외상을 단장으로 한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노동당과 일·북 수교교섭 재개를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나, 이후 양국 정부간 수교 교섭 재개문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일본은 일·북 관계개선을 위한 여건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측 요청에 따라 6월 및 10월 2차례에 걸쳐 50만톤의 쌀을 지원하였고, 유엔기관의 요청에도 부응하여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50만달러를 지원하였다.

## 나. 중국

### 1) 개관

1995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의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10%이상의 고도 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확보를 위해 활발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다. 향후에도 중국은 장쩌민(江澤民) 주석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달성한 반면 땡샤오핑(鄧小平)의 건강악화에 따른 후계 체제문제,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불가상승, 빈부격차의 심화 및 부정부패 등 정치·경제적 문제도 발생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만문제와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의 외교적 갈등을 노정시키기도 하였다.

## 2) 국내정세

1995년에도 중국은 양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후계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정치·경제체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특히 1995년 3월 개최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3차 회의에서 리펑(李鵬)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펑샤오핑(鄧小平) 동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념과 양쩌민(江澤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를 강조하였다.

중국은 1993년도 전인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에 명문화한 데 이어 1994년도 전인대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확립을 국가 최대 과제로 정립한 후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각종 개혁·개방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왔으며, 1995년도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입법작업이 본격화된 한 해였다. 또한 1995년 9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중국의 미래의 청사진으로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9.5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가 공식 발표되었다.

한편 이러한 정치와 체제의 안정 노력외에 중국은 지난 1년동안 천시통(陳希同) 전 북경시 당서기 해임 등을 포함한 대규모의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벌이는 등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1995년에 중국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0%이상의 경제성장 및 20%대의 교역증대를 달성하였다. 반면 물가 앙등, 소득격차 확대, 국영기업

문제, 농촌 문제,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1996년 3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4차 회의시 발표된 ‘1995년 국민경제사회 발전계획 업무상황보고’에 의하면 1995년도 국내 총생산은 5조 7,733억 RMB로서 10.2%가 성장하였으며, 홍수·한발 등 재해에도 불구하고 농업 등 1차산업이 4.5%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2차 산업은 13.6%, 3차산업은 8%의 성장을 보였다. 또한 통화·재정 긴축정책, 고정자산 투자의 엄격한 통제 및 각종 물가 안정 관리시책의 강화를 통해 1995년 중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4.8%에 그침으로써 인플레 억제정책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대외경제부문에서도 새로운 진전이 있었는데 대외교역은 수출 1,488억 달러(전년대비 22.9% 증가), 수입 1,321억달러(14.2%)의 실적을 보여 전체 교역액은 2,809억달러에 달했으며, 대외차관 도입은 107억달러이며 외국인 투자는 377억달러에 이르렀다.

### 3) 대외관계

중국은 1995년도에도 현대화와 개혁, 개방정책의 추진에 유리한 안정적인 주변환경 조성과 함께 경제·군사력 성장을 배경으로 국제적 역할 증대 추구를 주요 외교목표로 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려는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수년전부터 일기 시작한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는데, 기회있을 때마다 중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정세가 안정되어야 하며, 국제환경도 장기간 평화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세계 각국 특히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평화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치아오스(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일(4. 10-17)

및 방한(4. 17-22),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유엔창설 50주년 기념식 참석(10. 21, 뉴욕), 장쩌민 주석과 Clinton 미 대통령간의 중·미 정상회담 개최(10. 24) 및 장쩌민 주석의 한국 방문(11. 13-17) 등 고위급 인사의 활발한 방문활동과 정상외교로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총리급 이상의 외국 고위인사의 방중 활동은 무라야마(村山) 일본 총리(5. 2-6), Chretien 캐나다 총리(11. 5-10) 등 총 52회로 50여명의 세계 각국의 총리급 이상 고위인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우호협력관계를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장쩌민 국가주석은 1995년 1월 30일 하나의 중국원칙 견지 및 대만독립 반대, 양안 지도자간 상호 방문 및 회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對) 대만 8개항을 제의하였다. 한편, 1995년 6월 리명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를 계기로 양안간 비공식 대화가 중지되는 등 중국·대만 관계가 경색되었다.

미국과의 관계는 갈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해노력이 계속되었는데, 중국은 미국이 리명후이 대만 총통의 방미를 허용한 것을 '하나의 중국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주미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였다. 한편 양측은 두차례의 외무장관 회담(8. 1 브루나이, 9. 27 뉴욕) 및 Clinton 미 대통령과 장쩌민 국가 주석간의 정상회담(10. 24 뉴욕)을 개최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펼치기도 하였다.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이나 기술때문에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일본의 우익화, 일본내 정치 불안정에 따른 반중국적인 경향의 등장, 중국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무상원조 동결 방침 결정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 분위기를 보이기도 하였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1995년 5월 장쩌민 국가주석, 6월 리펑(李鵬) 총리가 각각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관계 증진 추세가 보였으며, 당초 11월

예정되었던 Yeltsin 대통령의 방중은 Yeltsin의 건강 문제로 연기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 들어와 아세안(ASEAN)과의 관계에서는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1995년도에는 이 문제를 국제법이나 영해법내에서 해결할 것을 시사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여 초청·방문 외교를 전개해 왔는데 1995년도에도 Castro 쿠바 대통령 방중(11. 26-12. 2) 등 초청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리평(李鵬) 총리의 모로코 방문(10. 3-4) 및 멕시코 방문(10. 5-9) 등 방문외교를 펼침으로써 제3세계와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 다. 동남아 지역

##### 1) 지역정세

아세안(ASEAN) 7개국(브루나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로 이루어진 동남아 지역은 1995년에도 전반적인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아세안 회원국의 확대와 단결을 추구하면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제 협력에 있어서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역내 불안요소로 작용해 온 캄보디아 문제는 크메르루즈 세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 지역 불안요소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감소된 가운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인도지나 3개국도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역내 불안요소인 남사군도 문제는 1995년 2월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서에 중국이 시설물을 설치한데 대해 필리핀이 외교적

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무력시위를 하는 등 중국과 필리핀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남사군도 문제는 역내 분쟁 요소로 계속 남게 되었다. 또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이 지역의 교통로 확보 및 안전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개입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남사군도 문제는 단순한 지역분쟁으로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도 진척되고 있는데 아세안과 중국간 첫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 3월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또한 1995년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법 및 1992년 남지나해에 관한 아세안 선언상의 제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국도 이 문제를 국제법 및 해양법에 따라 처리할 용의를 표명했다.

1994년 7월에 출범한 ARF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역내 주요 국가들에게 동아시아 지역내의 안보문제를 다자 차원에서 논의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안보 상황에 대한 상호 입장교환과 예방외교의 중요한 장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 협력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아세안은 제28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95. 7. 브루나이 반다세리베가완)에서 베트남의 7번째 회원국 가입을 결정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의 진요성을 천명하였다. 아세안은 또한 1996년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태국 방콕) 추진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있어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의 수행과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EC)의 조기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제27차 아세안 경제장관회담(1995년 9월, 반다세리베가완)에서는 WTO의 출범, NAFTA, EU 등 지역협력체의 출범 등 세계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2003년까지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다시금 밝히는 한편, 회원국들간에 관세인

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유화도 추진키로 함으로써 AFTA의 실현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995년 12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역내 안정과 평화유지 체제에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 수행,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ASEM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콕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 회담에서 동아시아의 핵무기 확산 방지를 통한 지역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동남아비핵지대조약(SEANWFZ) 서명과 함께 AFTA를 조속히 실현한다는 것이 합의되었으며, 아세안 7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동남아 10개국(SEA-10)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됨으로써 동남아 전역에 걸친 역동적인 경제발전의 확산과 향후 아세안의 협력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아세안 내부의 협력 방향의 제시, 그리고 ASEM 주도를 통한 역외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은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이 이루어 온 정치·경제적 성취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아세안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2) 각국 정세

동남아 각국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에 주력하였다. 브루나이는 199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회교문제에 대해서는 말레이지아 및 인도네시아와,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풍부한 석유와 LNG 및 3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추진중인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기간산업 확충, 식량

자급, 산업 다원화 등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나 제반 여건의 제약으로 단시일내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언론인에 대한 규제와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된 인권문제로 서방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년간 비동맹 의장국 및 1995-96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제6차 경제개발 계획의 과감한 추진과 함께 경제자율화 조치를 시행해 온 결과, 외국인 투자(승인 기준 399억달러로 1994년 대비 68.4% 증가)가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1995년에도 7.3%의 고도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3년 빠른 199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 상승 추세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로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말레이지아는 1995년 4월 실시된 총선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집권 여당 연합인 국민전선(UMNO)이 압승하여 Mahathir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UMNO 체제가 1999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 비동맹과 영연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말레이지아는 회교회의 기구(OIC) 참여 등 회교국과의 단결과 회교문화권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말레이지아는 아세안의 결속 강화를 도모하면서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EC) 추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1988년 이래 8%이상의 고도 성장을 해 온 말레이지아는 1995년에도 물가상승률을 3.4%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9.5%의 경제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027달러를 기록하였다.

필리핀은 1995년 5월 총선에서 여당(Lakas-NUCD)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정치안정을 일단 확보하게 되었으나, 상원에서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경제는 Ramos 대통령의 집권 아래 상대적인 정치 안정에 힘입어 1992년 제로성장에서 1995년도에는 약 5.3%의 경제성장

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회교반군(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의 분리주의 운동과 각종 범죄의 만연 등이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경제면에 있어서도 외채증가(1995년말 400억달러), 만성적인 무역적자(1995년 약 90억달러), 높은 실업률(8.8%) 등이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대한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구도의 변화와 수정은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의 적절한 대안 제시, Goh Chok Tong 총리의 원만한 국정 운영 등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5년도에도 8.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싱가포르는 ASEM 개최를 제안하여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1995년 12 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아세안자유투자지대(AFIA)를 제창하였다.

태국은 1995년 5월 국회 해산에 따른 Chuan 내각의 종료 이후 1995년 7월 총선에서 태국 국민당이 다수당으로 부상하면서 6개 정당과의 연정을 구성하여 Banharn 내각이 출범했다. 하지만 각료직 배분을 둘러싼 태국 국민당내의 알력과 연정구성 정당간의 이해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1995년도에 8.6%의 경제성장과 5.8%의 인플레를 기록하는 한편, 자본재 수입증가와 고도성장에 따른 소비재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베트남은 1986년 아래 도이모이(쇄신)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1995년도에도 9.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995년 7월 아세안 가입, 1995년 8월 미국과의 수교 등으로 대외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의 여파와 미국과의 수교 이후 제반 정치, 사회적 문제가 파생되자 젊은 세대의 정치 영입 등을 통해 이념적,

정치적 변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라오스는 1986년 신경제정책 (New Economic Mechanism) 채택 이후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정책을 꾸준히 추구한 결과, 1991-95년간 평균 6%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사회, 경제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기술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라오스는 전통적인 정치적, 이념적 협력자로서 베트남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태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라오스는 역동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이전에 아세안에 가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1993년 9월 출범한 캄보디아 정부는 정파간 권력균점을 통하여 정치안정을 이룩해 왔다. 국제사회의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캄보디아가 안정된 국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본 주도로 시작된 캄보디아 재건 국제회의 (ICORC)는 1995년 3월까지 3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하여 캄보디아 지원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재원조달에 성공하였다. 그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크메르루즈 반군은 외세의 원조중단과 정부군의 공격 등으로 세력이 격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세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미얀마는 1988년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부가 국내 통치체제를 확고히 해나가는 한편, Aung San Suu Kyi 여사를 석방하는 등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서방의 외교적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미얀마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1996년 7월 아세안 외무장관회담에서 옵저버 자격을 취득할 예정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1996년을 '미얀마 방문의 해'로 정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 3) 우리 나라와의 관계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정책상 우선 순위를 부여해 왔다. 우리 나라는 1995년에도 동남아 지역, 특히 아세안 7개국과 실질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5년도 대아세안 총교역액은 약 280억달러(수출 179억달러, 수입 101억달러)로 아세안은 미국(545억달러), 일본(497억달러), EU(345억달러)에 이어 우리의 제4위 교역 대상지역이 되었으며, 투자에 있어서도 1995년 한해 동안 595백만달러로 중국(814백만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아세안에 대한 우리의 해외 건설 수주도 1995년도에 46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94년에 이어 아세안은 우리의 제1위의 건설 시장이 되었다.

1995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와 동남아 지역 국가간의 인적 교류도 활발하여 동남아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은 100만명을 초과하였고 한국을 방문한 동남아인의 수도 20만명을 초과하였다. 또한, 우리와 동남아 지역 각국과의 고위인사교류도 활발하여 특히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95. 3, 덴마크), 유엔 총회(95. 10, 뉴욕)와 APEC 정상회의(95. 11, 오사카)를 계기로 김영삼 대통령과 동남아국가 정상들간의 개별회담 및 외무장관회담이 진행되었고, 1995년 4월 Do Muoi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을 필두로 1995년 8월 Jayakumar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방한, 1995년 9월 이홍구 총리의 싱가포르 방문(World Economic Forum 참석차), 1995년 10월 Phongsavat 라오스 외무차관의 방한, 1995년 11월 U Ohn Gyaw 미얀마 외무장관의 방한 등이 이루어졌다.

한·아세안 협력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1995년 7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ASEAN-PMC)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여, 북한 핵문제, 남북대화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입장을 개진하였다. 또한 1993년 말레이지아 쿠칭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Dialogue 회의에 이어 제2차 회의가 1995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한·아세안간 교역, 투자, 관광 진흥과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방안과 아세안 진흥센터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제3차 회의는 1997년 필리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다.



Do Muoi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방한(95. 4. 12, 청와대)

1995년 10월 25일 Phongsavat 라오스 외무차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수교합의 공동성명서에 서명함으로써 라오스는 우리의 180번째 수교국이 되었다. 지난 1975년 인도지나 반도에 공산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소원해진 한·인도지나 관계가 1992년 베트남과의 수교에 이어 라오스와

의 수교가 성사됨으로써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 나라는 라오스와 수교함으로써 목재 등 자원은 물론 상당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메콩강 개발 참여 기회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지역내 유일한 미수교국인 캄보디아와의 관계정상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라. 서남아지역

#### 1) 지역정세

인류문명의 발상지로서 오랜 역사와 다양한 종교 및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12억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남아 지역은 빈곤과 테러, 종교와 인종분규로 인해 전반적으로 불안한 정세를 보이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에도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경쟁과 카시미르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긴장,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지속은 이 지역의 정세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국가들은 세계무역 자유화 추세 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개혁·개방경제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 등 7개국으로 구성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 및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1994년 4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 제7차 SAARC 정상회담에서는 남아시아 특혜무역제도(SAPTA) 기본문서가 서명되어 회원국간 실질협력 증진면에서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의 뿌리깊은 불신, 경제적 격차, 종교 및 인종분규 등은 서남아 지역 국가들이 지역협력체를 통한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2) 각국정세

인도는 1991년 6월 총선결과 Rao 총리가 집권하여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1994년말 실시된 4개주의회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하여 야당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었다.

파키스탄은 Bhutto 총리의 인민당(PPP)이 1993년 10월이래 집권하였으나 여. 야간 치열한 정쟁 지속과 일부 지역에서의 치안악화 등의 문제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총리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 내부의 상호관계가 원만하여 정권자체의 안정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994년 3월 실시된 보궐선거의 관권선거 시비로 여. 야 대립이 격화되자 야당세력은 Zia 총리의 조기 퇴진과 과도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1994년 12월 야당의원 전원(147명)의 총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정국이 악화되었다. 이들의 공석에 대한 보궐 선거는 당초 1995년 9월 17일로 결정되었지만 여당(BNP)이 전국적인 홍수피해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하여 12월 15일 실시키로 하였고, 야당측은 이를 정권을 연장하려는 여당측의 의도로 규정지으면서 이 선거에 불참하고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었다.

1994년 11월에 취임한 Kumaratunga 스리랑카 대통령은 소수민족인 타밀의 인종분규 해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북부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정부군과 무력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타밀 게릴라 반군단체(LTTE)와 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였으나, 협상이 무산되자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여 1995년 12월 LTTE 본거지인 Jaffna시를 탈환하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인에게 어느정도 자치권을 인정하는 지방분권화 계획을 발표하여 타밀 인종분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북부 정글 지역으로 피신한 LTTE는 정부군과 무력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네팔에서는 1994년 11월 총선에서 네팔공산당 (UML)이 승리하여 최초의 공산당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1995년 9월 10일 의회에서 네팔의회당 (NC) 등 야당이 상정한 정부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공산당 정부는 집권 9개월만에 붕괴되고 Deuba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부탄은 국내 소수민족들의 종족차별정책 철폐 요구 등 정세불안요인이 증가하자 현 절대왕정의 체제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Rabbani 대통령 세력 등 여러 파벌간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1994년 7월이후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태동한 회교학생 무장단체 Taliban의 세력확장으로 새로운 정세변화를 겪고 있다.

### 3)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우리 나라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회원 7개국 전체와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아프가니스탄과는 아직 외교관계가 없다. 1995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한 기회에 Kumaratunga 스리랑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Zia 방글라데시 총리를 1995년 5월 방한 초청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서남아지역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다졌다. 한편, 우리 나라와 서남아 지역 국가간의 교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서남아 국가들의 외국 자본 투자유치 정책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서남아 투자도 활성화 추세에 있다.

서남아 지역은 저임금 노동력 확보라는 이점과 거대한 시장 잠재력 (인구) 등으로 우리의 유망한 경제진출 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적극 추진중이며,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성공적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우리 나라의 서남아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관계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 마. 대양주 지역

### 1) 지역정세

호주, 뉴질랜드, 휘지, 파푸아뉴기니, 기타 다수의 소도서국 및 자치령으로 구성된 대양주 지역은 미국, 영국 등 전통적인 우방국가와의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시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남태평양포럼(SPF)과 남태평양위원회(SPC) 등 지역 다자 기구를 통하여 안보, 경제 및 환경, 자원보존 등 역내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1995년 프랑스의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재개는 역내 국가와 반핵단체들의 큰 우려와 반발을 일으켰으나, 결국 프랑스의 핵실험을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주요 대외정책 목표로 추진해 온 호주와 뉴질랜드는 1996년 3월 방콕에서의 제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1차 회의 참가는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2차 회의부터의 참가를 위한 아세안내 콘센서스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 2) 각국정세

호주 Keating 정부는 1990년대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국내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집권이래 적극 추진해 온 아·태 무역자유화와 아시아 중시정책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부심하였다. Keating 정부는 1994년 제2차 보고르 APEC 정상회의 성과의 구체적인 결실을 위해 1995년 11월 제3차 오사카 APEC 정상회

의에서 보고르(Bogor) 선언의 실천계획 수립과 회원국의 예외없는 농산물시장 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호주-뉴질랜드 경제협력 관계(Closer Economic Relations : CER)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와의 연계 추구 등 동남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노력을 중대하였다.

호주는 냉전이후 아·태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의 계속적인 아시아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ARF 등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통한 다자안보 구조 강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핵 비확산, 군비축소, 환경, 인권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에서의 발언권 강화와 1997-98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호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뉴질랜드는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호주 등 외국자본의 유입에 힘입어 6%를 상회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실업률도 1983년 이래 최저치인 7.4%를 기록하는 등 경기활성화 추세를 시현하였다. 또한 1993년 총선 결과, 불과 1석 차이로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olger 총리는 개인적 인기와 경제호황 및 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정국안정을 이룩하였다.

뉴질랜드는 호주와의 전통적인 유대관계 발전과 CER에 기초한 경제협력 지속을 최우선의 대외정책으로 삼으면서, WTO, APEC 등에서의 무역자유화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가운데 동아시아가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등장함에 따라 APEC내 역할 중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등 아시아 친화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4년 발족한 'Asia 2000재단'을 통한 일반 국민의 대아시아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하였다.

뉴질랜드의 강력한 비핵정책으로 그동안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는 냉전종식과 Clinton 행정부의 등장이래 회복 추세를 보여 왔으며, Bolger 총리가 1995년 3월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양국간의 정치대화가 복구되었

다.

남태평양의 중심적인 지역기구인 남태평양포럼(SPF)은 역내 핵실험 방지, 어족 및 삼림자원 보존, 지역 원조의 효율적 활용 등 공동이익의 추구를 위한 기능 강화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기타 역내 소도서국들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경제성장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와 투자 유치 노력을 계속하였다.

### 3)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 지역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보, 무역, 투자, 과학기술, 문화, 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관계를 심화·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는 유엔, WTO, APEC, ARF 및 ASEAN-PMC 등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다른 대양주 지역 국가들도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뿐만 아니라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반도의 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호주는 1995년 KEDO에 미화 500만달러, 뉴질랜드는 50만 뉴질랜드달러(미화 약 33만달러)의 기여금을 각각 제공하였다.

1995년에는 Korman 바누아투 총리(6월), McKinnon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7월), Rabuka 휘지 총리(8월)가 방한하여 양자관계의 확대·심화에 기여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오사카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Keating 호주 총리와 개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공로명 외무장관은 Evans 호주 외무장관과 7월 브루나이에서 (ASEAN-PMC 및 ARF 계기), 10월 뉴욕(유엔 총회 계기) 및 11월 오사카(APEC 각료 회의 계기)에서 각각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간의 긴밀한 협

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한편, 한·호주 양국간 교역량은 1995년 62억달러를 넘어 1994년과 대비해 2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는 호주의 제2의 수출 대상국으로서 교역량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1995년에는 28 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기록되었다.

한·뉴질랜드 양국 교역량도 1995년 10억달러를 초과하여 연 20%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우리 나라의 대뉴질랜드 수입이 8억달러를 초과하여 무역적자의 심화추세를 보였다.

우리 나라의 대호주, 뉴질랜드 무역역조는 주로 필수 원자재 구입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며, 우리 정부는 무역역조 개선과 장기적인 확대균형 달성을 위해 수입관세 인하, 반덤핑 규제완화 및 정부 조달시장 접근 등 호주와 뉴질랜드측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우리 나라와 호주, 뉴질랜드간의 인적교류는 수년간 활발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95년 3월 우리 나라는 호주와 한·호주 양국 청소년에게 1년 기간의 취업관광비자(Working Holiday Visa)를 발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청소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호주 방문객 수는 1994년 11만명에서 1995년 16만명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뉴질랜드방문객 수도 1995년 10만명을 넘어서서 전년과 대비하여 70%이상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는 1995년 9월 남태평양포럼(SPF)의 대화상대국(PFD)이 됨으로써 남태평양 외교에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SPF 회의에 이시영 외무차관이 참석하여 10만달러를 SPF에 지원키로 약속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휴지와의 대한항공 직항로가 1995년 9월 개설되어 우리 나라의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1995년 휴지

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수가 5,419명으로 전년에 비해 194%나 증가하였다.

기타 도서국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 나라는 SPF 가입 등 대양주 지역 외교기반 저변 확대와 수산물 및 해양자원 개발 등에 있어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자재 무상원조, 연수생 초청, 도서국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 관광·건설·조선에 대한 투자확대 등 경제협력 관계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1994년 미국 신탁통치로부터 독립한 서태평양 도서국인 팔라우 공화국과 1995년 3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 2. 미주지역

### 가. 미국

#### 1) 국내정세

1994년 11월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하게 된 여소야대 정국은 1995년도에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간 정책노선 이견으로 많은 난관을 예견하고 있었다. Clinton 대통령은 1994년 12월 Oval Office 연설 및 1995년 1월 연두교서를 통하여 중산층 권리 육성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New Covenant)’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공화당은 의회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간선거때부터 공약해온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 관련 법안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Gingrich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104회기 의회 시작부터 이 문제에 전념하였다. 이 법안은 공화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1995년 4월 휴회때까지 총 9개항 22개 법안중 21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그중 대통령의 예산안 선별 거부권 법안과 재원조달 없는 지방정부 지출부담 금지 법안 등을 포함한 3개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균형예산 법안은 상원에서, 의원임기 제한 법안은 하원에서 각각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으로서는 Gingrich 하원의장의 지도력에 힘입어 일반적인 예상보다 빨리 대부분 법안들을 의회에서 심의, 통과시킴으로써 선거 공약 이행에 있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5월 이후부터의 국내 정국은 균형예산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Clinton 대통령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연방 예산적자 해소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무리한 축소와 교육·환경 분야의 예산 삭감 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공화당으로서는 중간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예산적자 해소를 위한 균형예산 달성, 중산층 세금 감면, 의료보험 제도 개혁 및 정부기구 축소 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양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은 특히, 1996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양보하기 힘든 핵심적인 정책 사안에서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정국의 경색이 불가피하였다.

공화당은 6월 29일 2002년까지 항후 7년간 총 8,940억달러의 연방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하 양원 조정 균형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러한 균형예산 법안 추진을 1996년도 연방정부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Clinton 행정부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였으나, Clinton 대통령은 이러한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양측은 이견을 해소치 못하고 1996년도 예산편성 시한(9월 30일)을 넘기고 말았으며, 일단 11월 13일까지 짐정예산 편성이라는 편법으로 극한 상황은 회피하였다. 그러나 공화당안대로 상·하원을 통과한 균형예산 실현 법안과 연방부채 상한선 인상 법안에 대해 Clinton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우려되던 연방정부 기능의 일시정지 사태가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연방정부 기능 정지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비등하자 양측은 일단 11월 19일 균형예산 실현 원칙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시키기로 함으로써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유효한 잠정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연방정부 기능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균형예산 법안의 핵심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12월 15일에 개최된 백악관, 민주당, 공화당간 최종 협상마저 결렬됨으로써 12월 16일부터 연방기능 일부 정지 사태가 다시 시작되어 연말까지 이어짐으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의 연방정부 기능정지 사태를 기록하는 등 정국 혼란과 경색이 야기되었다.

1996년 11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측에서는 특별한 경쟁상대가 없어 Clinton 대통령의 재지명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1995년 4월 14일 재선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발한 선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화당측은 1995년 2월 Gramm 후보를 선두로 출마선언이 이어져 Dole, Buchanan, Alexander, Specter, Forbes 등 총 10명이 후보 선언을 함으로써 혼전을 벌였다. 특히, 대선 후보로 가장 주목받던 Powell 전 합참의장과 Gingrich 하원의장이 11월 각각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공화당측은 Dole 후보가 선두주자로서 나서게 되었다.

한편, 1995년 4월 19일에 발생한 Oklahoma 폭탄테러 사건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테러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Clinton 행정부는 테러 방지법안(Anti-Terrorism Bill)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1995년중 미국 경제는 전년도에 단행한 금리인상 효과가 경제 전반에 파급되면서 경기 둔화를 가져와 약 1.4%의 저성장을 기록하였다. 고용은 1995년도 상반기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5.6%의 저실업율을 유지하였

으며, 물가도 2/4 분기이후 안정세를 지속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2.5%를 기록하였다. 재정적자는 계속 큰 규모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부 지출의 삭감이 추진되었다.

균형예산 실현 문제를 둘러싼 Clinton 행정부와 공화당측의 대립은 1996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있어 양측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의 해결은 1996년 미국 국내 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 2) 대외정책

1994년 11월 중간선거 결과 여소야대의 정국이 전개됨에 따라 Clinton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1995년중 적지않은 국내적 제약속에 추진되었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국내문제 우선정책에 따라 안보회복법안, 국무부 예산 감축, 대외원조액 삭감 등을 추진함으로써 Clinton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에 적지않은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미국내 일부의 신고립주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Clinton 대통령은 1995년 연두교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참여와 지도력 발휘라는 국제주의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주요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5년 9월 팔레스타인 자치 확대 협정과 11월 미국 Dayton에서 조인된 보스니아 평화안 등 일련의 분쟁 해결과정에서의 미국의 개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냉전이후 국제안보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에 있어서도 미국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1995년 4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을 이끌어 냈으므로써 향후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1995년 6월 쿠알라룸푸르 미·북 합의 및

12월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 협정의 체결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Clinton 행정부는 1995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밝힌 것처럼 핵 비확산 문제를 포함하여 테러, 마약 밀매, 조직 범죄 등 냉전이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해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미국은 이상과 같은 국제안보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개방적 세계 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미국은 WTO 비준을 통해 1995년 1월 1일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가 원만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12월 구주연합(EU)과 신대서양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아·태지역 국가와는 11월 오사카 APEC 정상회담에서 아·태지역 무역 자유화를 위한 행동지침에 합의하였다. 또한, 칠레 등의 가입을 통한 NAFTA 확대와 범미주지역 무역 자유화 추진 등 개방적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간 경제협력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주도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제반 대외정책 과제를 이룩해 나가는 데 있어 주요 강대국과의 건설적 협력관계 유지에도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구주연합(EU)과의 관계에 있어 1995년 12월 마드리드에서 신대서양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적인 유대관계 확대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정치·안보적 도전 요인에 대한 협력 관계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보스니아 문제에 있어 미국과 EU의 공동 행동은 범대서양 동맹관계를 재확인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은 동유럽 국가들의 NATO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냉전이후 보다 안정된 유럽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Clinton 행정부는 미·일 관계에 있어 양국간 안보동맹체제의 중요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양국 관계가 경제·통

상 관계 위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여 냉전이후 변화된 국제, 지역 정세에 부응하고 각기 국내적으로 양국 동맹체제의 의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Nye 국방차관보를 중심으로 양국간 안보 공동성명 채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안보 분야에서의 일본과의 협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 시정을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하여 20개에 이르는 시장접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일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데 진전을 이룩하였다.

한편, Clinton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포괄적 개입정책 (comprehensive engagement policy)’을 채택하여 중국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95년중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리펑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 인권, 대량파괴무기 확산, 무역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5년 10월 뉴욕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미국은 대러시아 정책에 있어 러시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Yeltsin 정부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미·러간의 협력관계는 1995년중 북한 핵문제, 중동 평화협상 등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왔으나, NATO의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저항, 보스니아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은 양국이 지니는 협력의 한계를 노정시키기도 하였다.

Clinton 대통령은 1995년중 아이티, 보스니아, 북아일랜드, 중동 등지에서 일련의 외교적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6년에도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6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Clinton 행정부는 기존 외교정책 노선의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나. 캐나다

##### 1) 국내정세

Chretien 수상이 이끄는 집권 자유당 정부는 1995년 들어서도 국가적 단합 도모, 재정적자 감축 및 고용증대,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주요한 정치적 현안이 되어 왔던 퀘벡 분리. 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당 정부는 퀘벡주 자유당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퀘벡 분리 주민투표 부결을 위한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1995년 2월에는 퀘벡을 제외한 최대 불어 사용 지역인 New Brunswick주 출신의 Romeo Leblanc 전 상원의원을 총독에 취임시키는 등 영어권과 불어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 10월 30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퀘벡 분리. 독립안이 찬성 49.4%, 반대 50.6%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는데, 이는 지난 1980년 5월 주민투표시 찬성 40%, 반대 60%에 비해 분리·독립 여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국가적 단합에 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Chretien 수상은 퀘벡분리 주민투표와 보다 많은 권한의 주정부 이양을 둘러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대립 등으로 야기된 국론의 분열을 치유하고, 국가적 단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11월 퀘벡주 특수성 인정, 퀘벡 등 5개주에 대한 헌법개정 거부권 부여 및 주정부 권한 강화 문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한편, 캐나다의 국내경제 사정은 수출산업의 호조로 1993년이래 지속

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자 수요의 침체와 퀘벡분리 주민투표로 인한 국내 정국 불안 등의 요인으로 1995년도 경제 성장율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2.2% 수준을 기록하였다. 자유당 정부는 국내 고용 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경제에 큰 부담요인이 되어 온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자폭을 1996/1997 회계년도(1997년 3월 종료) 까지 GDP의 3%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비 삭감,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기구 및 예산 감축 등의 긴축정책을 강화하였다.

자유당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주 정책 실시와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각종 조치(로비스트 활동 규제법 강화, 정부내 Ethics Counsellor직 신설등) 등을 추진함으로써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퀘벡 분리·독립 문제와 헌법 개정 문제 등은 향후 Chretien 정부의 정치력을 시험할 주요한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대외정책

캐나다 정부는 Chretien 수상의 외교분야 선거 공약과 상·하원 특별 위원회의 외교정책 보고서(1994년 11월)에 기초하여 1995년 2월 신외교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향후 국제무대에서 캐나다 외교활동의 3대 핵심목표로 캐나다의 고용과 번영 촉진, 안정적 국제관계 틀속에서의 캐나다 안보 확보, 캐나다의 가치와 문화의 대외 확산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하에 캐나다는 우선 총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1995년 2월 Chretien 정부 수립후 처음으로 캐나다·미국 정상회담을 오타와에서 개최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캐나다는 아·태 지역 및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강화로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하

였다. APEC을 통한 아·태지역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 칠레를 위시한 중남미 제국의 가입을 통한 NAFTA 확대 추진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Chretien 수상은 취임후 두차례(1994년 11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1995년 2월 중남미)에 걸쳐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업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민·관 고위 통상사절단(Team Canada)을 이끌고 아시아 및 중남미 각 지역을 순방하는 등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캐나다는 이와 함께 유럽의 새로운 질서 형성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NATO의 보스니아 평화유지 활동에 1000명의 군병력을 파견하고, 러시아의 민주화와 경제개혁 지원, 동구권 국가의 NATO 가입 지지 등을 통해 유럽에서 캐나다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국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의 신속 대응능력 강화 등 유엔의 권능과 역할 제고를 강조하는 한편, 아이티 등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자국군을 파견하는 등 국제평화 유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대량파괴무기 확산, 환경 악화, 대량 난민, 국제범죄, 마약거래 등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우리 나라와의 관계

한·캐나다 양국은 중위권 국가(middle power)로서의 유사성을 살려 1995년에도 양국간 특별동반자 관계(Special Partnership)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1995년중 두 차례에 걸쳐 작업반 회의를 개최(5월 오타와, 9월 서울)하여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특별동반자 관계의 협력폭을 경제분야 뿐 아니라 비경제 분야로까지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각종 계기(1995년 7월 ASEAN-PMC, 9월 유엔 총회 등)를 이용한 양국 외무장관 회담 및

제8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1995년 9월 7일, 오타와)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 ASEAN-PMC 및 APEC 등 지역협력 기구에서의 양국간 협력, 그리고 특별동반자 관계의 구체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협력 기조하에 1995년 10월에 이루어진 김영삼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 방문은 최근 한·캐나다 특별동반자 관계의 구체화를 통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양국간 협력 관계를 각 분야에 걸쳐 총점검하는 한 편, 앞으로 이와 같은 발전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Chretien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특별동반자 관계의 심화·확대 및 한·캐나다 포럼의 출범, 그리고 정상회담 직후 5개의 양국간 협력협정(산업기술협력 양정, 농업협력 양해각서, 취업관광프로그램 양해각서, 국립공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사회보장협정 체결의향서)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한·캐나다 양국은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전후하여 유엔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캐나다의 KEDO 가입(1995년 6월 23일)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기여금 제공 등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다. 중·남미 지역

### 1) 지역 정세

중남미 지역은 이른바 'Lost Decade'라고 불리우는 1980년대의 사회·경제적 침체상황을 극복하고 1990년대 들어 'Hopeful Decade'를 향해 힘찬 회복의 길을 걷고 있어 동아시아에 이은 제2의 신흥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1995년은 정치적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화 전통을 확립하고, 경제적으로는 멕시코 폐소화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외개방과 구조조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물가안정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꾸준한 경제성장의 기조를 이룩한 한 해였다.

우선 정치면에 있어서 중남미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1983년 아르헨티나의 민정이양 이후 군부통치에서 문민정부로 이행되었으며 1995년에는 중미의 아이티, 과테말라 및 남미의 아르헨티나, 페루 등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 또는 재창출이 이루어져 정치민주화의 전통이 확고히 뿌리내려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내 민주화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쿠바 난민 사태로 인한 미국과 쿠바간의 갈등, 인종적 갈등 및 부의 왜곡된 편중으로 유발된 멕시코 남부지역에서의 농민반란 사태, 지난 30년간 지속된 과테말라 정부와 반군(URNG) 간의 대립, 에쿠아돌과 페루간의 국경분쟁 등은 여전히 이 지역의 정세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중남미 지역의 구조적 사회 문제인 마약, 테러, 빙곤, 환경, 인권 문제 등은 민주화의 중대한 위협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역내 각국 및 지역차원의 공동대처 노력이 최근 강화되고 있다.

경제면에서 중남미 지역은 1980년대의 외채 위기와 고인플레이로 대변되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넘기면서 종전의 수입대체산업 전략으로부터 벗어나 민영화, 개방화, 자율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성장모델을 채택하여 시장개방, 인플레이 억제, 외채감소,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 중남미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연평균 3%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냉전 종식이후 주목받는 새로운 교역 및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1993년 EU 출범, 1994년 1월 NAFTA 발효 등 세계경제의 블럭

화 추세에 대응하여 이 지역 국가들은 기존의 소지역 경제공동체인 중미 공동시장(CACM),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안데스공동체(ANCOM),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지역 경제통합 노력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역내 무역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은 1995년 1월 1일 관세동맹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정식으로 출범시켰으며, 2005년 MERCOSUR와 EU간의 자유무역 실현을 목표로 1995년 12월 15일 EU와 기본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또한, 남미의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尔,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안데스공동체(ANCOM)는 1995년 2월 1일부터 대외공동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지역통합 움직임과 함께 1995년에는 남미공동시장과 안데스공동체간의 통합 추진도 꾸준히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 통합 경향은 1994년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미주 34개국 정상회담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위한 협상을 2005년까지 완료키로 합의함에 따라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의 태동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 2)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95년은 우리 나라의 대중남미 외교에 있어 주목할만한 발전적 계기를 이룬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로명 외무장관이 우리 나라 외무장관으로서는 1983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1995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 간 에콰도尔,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을 순방하였다. 이 순방은 1996년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량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신외

교 구상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 이은 제2의 신흥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중남미 지역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 되어 왔다는 사실외에도 상품수출 확대,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 기업 및 인력진출 등을 통한 투자 확대에 있어서 이 지역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있다.

중남미 각국과 이러한 유대관계를 돋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지속적인 인사교류로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혀온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중에는 특히 Menem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방한하였고, 우리 정부는 1995년 1월 1일 Cardoso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박정수 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하는 등 중남미 각국에 대통령 취임식과 안보리 진출 지지 교섭을 위하여 대통령 특사 6명을 파견하였다.

우리 나라와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관계는 근년들어 교역, 투자의 급속한 확대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1994년의 64억달러에서 1995년 70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0년 2.85%에서 1995년 5.9%로 급증하였고, 1995년도에는 한·중남미 왕복 교역 규모가 최초로 100억달러를 상회하였다.

또한, 이 지역은 북미와 유럽시장에의 우회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갖는 유망한 투자 지역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미와 카리브 지역에 대한 기존의 미국의 관세특혜 (CBI), 유럽의 관세특혜 (Lome 협정) 제도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및 각 소지역별 경제 통합을 적극 활용하고, 2005년까지 구체화될 예정인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창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투자 진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995년 말 까지 잔존 투자기준으로 238건에 약 3억4천만달러의 투자가 제조업, 수산업, 무역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들어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중남미 지역 투자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우리 나라와 같은 아시아 지역 선발 개도국들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중 태평양 연안국인 멕시코, 칠레가 이미 APEC에 가입한 데 이어 상당수의 중남미 지역 국가가 아. 태 지역 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구주지역

#### 가. 서구지역

##### 1) 구주통합의 진전

1995년 1월을 기해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구주연합(EU)에 가입함으로써 구주연합(EU)의 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구주연합(EU)은 세계 최대의 교역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1995년 6월 프랑스 깐느에서 개최된 구주연합(EU) 정상회담에서 중.동구 국가들의 가입과 관련한 구주연합 집행위원회의 백서가 승인됨으로써 비록 이를 국가들의 가입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가입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구주연합의 각종회의에서 중.동구 국가 및 남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991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은 경제분야 통합뿐만 아니라, 공동 외교안보정책, 내무. 사법분야까지 포괄하는 유럽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이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특히, 구주연합(EU)의 회원국이 향후 중.동구, 사이프러스

및 몰타, 발티제국 등으로 확대될 경우 현상태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따라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수정과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간회의(IGC)를 준비하기 위해 1995년 6월에 구주연합 15개국 외무장관의 대표들과 구주의회 및 집행위원회 대표로 구성된 실무작업반(Reflection Group)이 공식 출범하였다. 실무작업반은 현 구주연합(EU) 제도개혁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1995년 12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구주연합 정상회담에 제출하였다.

경제통합에 있어서는, 1994년 1월부터 유럽통화기구(EMI)가 설치되어 경제통화동맹(EMU)의 제2단계로 이행하였으나, 제3단계(단일통화 창출)로의 이행을 위한 회원국간 경제조화는 아직 부진한 상태이다. 1995년 6월 개최된 구주연합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1997년 단일통화 도입을 사실상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1999년이 단일 통화를 도입할 시기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1995년 12월 구주연합 정상회담에서는 단일통화 명칭을 EURO로 결정하고 1998년 초에 경제·통화동맹(EMU) 참가국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2) 주요국 정세

### 가) 독일

1994년 10월 실시된 연방하원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한 현 연정 여당(기민/기사당 : CDU/CSU)은 상·하원내 야당 세력 강화로 인해 원만한 정국운영을 위해서는 야당과 협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FDP)은 내분과 인기하락 등으로 인해 1995년 실시된 4개 주의회 선거에서 Hessen주를 제외한 3개주에서 모두 5%

득표에 실패하여 주의회 진출이 좌절됨으로써, 기민-기사당과의 연정기반이 점차 약해진 가운데 연정 붕괴 또는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제1야당인 사민당(SPD)은 1994년 10월 총선 패배 이후 당권을 둘러싼 내분과 명확한 정책대안 부재속에서 최근 인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1995년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사민당내 좌파를 대변하는 Lafontaine(현 자아르란트 주수상)을 선출하였는 바, 신임 당수의 좌파성향에 비추어 대외관계, 사회, 경제 분야에서 정부 여당과의 정책 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GNP 규모 세계 3위, 수출규모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 경제는 1993년의 마이너스 1.1% 성장 등 침체국면으로부터 벗어나 1994년 2.5%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1995년에는 마르크화 강세와 높은 임금인상으로 예상보다 낮은 1.9%의 경제성장과 9.4%의 높은 실업율을 기록하였다. 인플레율은 1994년의 2.7%로부터 1995년 2.0%로 하락하였으나, 재정적자 규모는 1995년 1,236억마르크(GDP의 3.6%)로서 경제 통화동맹(EMU) 진입을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 기준(GDP의 3%)을 상회하였다.

#### 나) 프랑스

1995년 5월 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Chirac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Mitterrand 대통령이 14년동안 이끌어왔던 사회당의 장기집권이 끝나고 우파정권이 출범하였다. 이어서 5월 18일 발족된 Juppe 총리의 제1차 내각은 실업문제 해결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재정적자 규모 축소 등을 신정부의 국정 추진방향으로 삼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국 불안정으로 제5공화국 현정사상 최초로 내각 발족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1차 내각이 끝나고 11월 7일

Juppe 총리하의 제2차 내각이 구성되었다.

1995년 11월에 접어들어서는 Juppe 총리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철도공사, 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약 3주간 대중교통망이 마비되고, 교육시설 및 교수진 확충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도 발생하여 정국은 물론 사회전체가 한차례 불안에 빠지기도 하였다.

Chirac 대통령은 1995년 6월 프랑스 국가안보와 핵억지력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년 9월부터 1996년 5월간 8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고, 1995년 9월 5일, 10월 2일, 10월 28일, 11월 22일, 12월 27일 등 5차례에 걸쳐 남태평양 Mururoa에서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한편 1995년도 프랑스 경제는 2.4%의 성장을 실현하였으며, 공공적자 감소, 물가안정, 환율안정 등을 이룩함으로써 안정기조를 유지하였다.

#### 다) 영 국

1995년 5월 실시된 잉글랜드 및 웨일즈지역 지방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은 노동당 48%, 보수당 25%, 자민당 23%의 지지율을 획득하였다. 이와 같이 보수당의 인기가 하락하게 된 것은, 유럽통합 과정 및 경제정책과 관련한 보수당내 갈등 심화, 보수당내 당정 고위인사들의 스캔들 및 보수당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Major 총리는 보수당 단합을 위한 충격요법으로 1995년 6월 22일 보수당 당수직을 사임하였으나 당권 경선에서 재선임되었고, 1995년 7월 6일 개각을 통해 당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경제적으로 영국은 1980년대 후반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긴축정책을 실시한 결과 1990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로 접어들어 1992년 말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실업율이 10%를 상회하는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2년 9월 유럽환율조정기구(ERM)에서 탈퇴하여 파운드화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수출증진을 도모하고,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인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펴 온 결과, 1994년에는 3.9%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실업율은 1993년 10.5%에서 1995년 8.2%로 감소하였다.

영국 정부는 연간 물가상승율을 1~4% 범위내에서 억제하되 현 의회의 법정임기가 만료되는 1997년 봄까지 2.5%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1995년 평균 물가상승율은 3% 상승하였다. 1995년 1/4분기중 20억파운드로 축소되었던 무역수지 적자폭도 수출 신장세가 둔화된데다가 수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다.

### 3)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95년에도 우리 나라와 서구 각국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는 빈번한 인적 교류와 다양한 정치, 경제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한층 공고해지고 성숙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을 재기로 프랑스, 체코, 독일, 영국, 벨기에를 순방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다자외교와 함께 세계 3대의 경제권의 하나인 구주연합(EU) 및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영국(95. 6, 런던), 스페인(95. 6, 마드리드), 이탈리아(95. 6, 로마), 스위스(95. 7, 베른), 독일(95. 9, 본), 화란(95. 9, 헤이그), 포르투갈(95. 8, 리스본), 스웨덴(95. 9, 스톡홀름) 등과의 정책협의회가 활발히 개최되었고, 국회-구주의회 협의회 대표단도 구주의회를 방문하여(95. 7) 서구 제국과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확대·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영국을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의 버킹엄궁 공식환영식 (95. 3. 8, 런던)

경제적으로는 1995년 처음으로 한·EU 교역량이 300억달러를 넘어섰고, 1994과 비교해 교역규모가 45%나 증가하는 등 한·EU 양자간에 전반적인 협력분위기가 제고되었다. 정부는 한·EU간 제반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하여 한·EU 기본협력협정 체결, 그리고 한·EU 공동정치선언 채택을 추진하였다.

#### 나.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 1) 국내 정세

###### 가) 의회정치 제도의 정착기반 구축

러시아 정치에 있어 1995년 한 해는 1994년 12월 발발한 체첸 사태로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12월 17일 실시된 제2대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 민족주의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Yeltsin 대통령이 추진하는 민주개혁 정책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던 해였다.

**<95. 12. 17 러시아 총선 결과>**

\* ( )안은 1993년 총선시 의석수

정치성향	정파·정당	지역구	전국구	합 계	비 고 (93년대비증감)
좌 파	공 산 당	58 (33)	100 (32)	158 (65)	
	농 민 당	20 (26)	- (21)	20 (47)	
	인민권력당	9	-	9	
	소 계	87	100	187 (112)	(+75)
무 소 속	-	77 (30)	-	77 (30)	(+47)
민족주의 세 력	자 민 당	1 (11)	50 (59)	51 (70)	
	러시아 공동체회의	5	-	5	
	소 계	6	50	56 (70)	(-14)
개 혁 파	야블로코 블록	14 (13)	31 (20)	45 (33)	
	러시아 민주선택당	9 (56)	- (40)	9 (96)	
	소 계	23	31	54 (164)	(-110)
중 도 파	우리집 러시아블록	10	44	54	
	여 성 당	3 (4)	- (21)	3 (25)	
	소 계	13	44	57 (68)	(-11)
기타정당	-	19	-	19	-
총 계	-	225	225	450	-

러시아 정부군에 의한 체첸반군 진압 작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던 6월 14일 발생한 체첸 반군의 ‘부도놉스크 인질사태’는 러시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경악과 우려를 자아냈으며 Yeltsin 대통령의 체첸사태 해결 능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민주세력의 개혁정책 추진 능력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체첸사태와 관련하여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을 고수해 오던 국제사회의 일각으로부터 체첸사태를 종결짓지 못한 채 인질사건 발생시마다 무력진압 방식을 취하는 러시아 정부의 인명경시 태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전세계의 관심과 주목속에 12월 17일 실시된 제2대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이미 선거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여주던 공산당이 예상대로 제1당으로 부상하게 됨으로써 구공산주의 체제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Chernomyrdin 총리가 이끌던 ‘우리집 러시아(Our Home is Russia) 블록’은 엘친 대통령의 후원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차지한 의석의 1/3 규모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러시아 정치에 있어서 1995년은 의회제도의 기반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한 해로 기록될 수 있다. 6월에 발생한 체첸반군에 의한 부도놉스크 인질사건으로 야기된 하원의 Chernomyrdin 내각 사퇴 결의와, 이에 맞선 Yeltsin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발동 경고로 증폭되었던 정치적 위기가 의회·행정부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구소연방 해체이후 과행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러시아 정치가 성숙해 가는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치적 발전이었다. 또한 7월과 10월에 Yeltsin 대통령이 심장질환 악화로 입원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지도력의 일시적 공백이 Chernomyrdin 총리에 의해 무난히 수습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의 러시아 정치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진일보한 모습으로서 러시아 정치가 제도화의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 계기였다.

#### 나) 시장경제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경제회복세 유지

체첸사태 등으로 인한 국내정치의 불안정과 제도적 불완전함 속에서도 1995년 한 해 동안 러시아 경제는 꾸준히 침체국면으로부터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주었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정부지출 억제라는 경제정책의 기본원칙은 1995년 한 해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95년초 국제통화기금(IMF)의 러시아에 대한 65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제공 결정은 러시아 경제의 앞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루블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달러화에 대한 루블화의 변동폭을 1달러당 4,550-5,150 루블사이에서 고정시키는 제한된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국내경제 부흥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외국 자본의 유치는 러시아 국내 관련 법령과 제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1995년 한 해 동안에도 뚜렷한 실적을 거두지는 못해 총 10억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 다) 독립국가연합(CIS) 정세

구소련 공화국들의 구소련 체제로부터의 분리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작된 독립국가연합(CIS) 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소련 시대의 상호 의존성의 와해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적 문제가 악화되자, 각 회원국들은 에너지 및 각종 산업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외 분쟁 해결에 있어 러시아에 대한 의존 필요성을 인식하여 러시아를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1월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간의 관세 동맹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향후 CIS 회원국간의 협력 방향이 개별 회원국간의 경제적 협력 강화 형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을 예고하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CIS 체제 강화 노력과 병행하여 CIS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도 진행되어 1995년 5월부터는 유엔 유럽본부에 CIS 전권대표가 상주하게 되었다. 또 9월에는 러시아가 CIS 전략지침을 마련하고 CIS 체제를 정치·경제적으로 통합된 국가 공동체로 발전시켜 CIS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러한 CIS 강화 움직임은 서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장 등에 대처하기 위한 러시아 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어 주목을 모았다.

그러나 혹해 함대를 둘러싼 러시아·우크라이나간의 긴장관계가 보여 주듯 CIS 체제내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이 있으므로, CIS 통합은 당분간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회원국간의 양자 또는 3-4개 회원국간의 협력을 주축으로 진전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2) 러시아의 대외정책

대외정책에 있어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1995년 한 해에도 계속되었다. 1994년 7월 나폴리 G-7 정상회담부터 정치회담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러시아는 1995년 6월 카나다 Halifax에서 개최된 G-7 회담에도 참석하여 제고된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새로운 구주안보 질서 수립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국가들간의 이견은 1995년 한 해 동안에도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작용하였다. 구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가입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확대하여 새로운 구주안보 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NATO의 확대를 자국 안보의 저해 요인으로 간주하는 러시아간의 이견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시대 구소련을 겨냥해 군사적 목적으로 창설한 NATO의 확대에 반대하는 한편,

보다 비군사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인 구주안보협력기구(OSCE)의 기능 강화를 통해 새로운 구주안보 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꾸준히 모색해 오고 있다. 러시아의 아·태 정책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협조관계 유지, 중국과의 선린관계 강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 1995년 3월에는 Kozyrev 외무장관의 중국 및 일본 방문이 있었고, 5월에는 Grachev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이 있었으며, 5월과 6월에는 각각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리펑(李鵬) 중국 국무원 총리의 러시아 방문이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또한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자협력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1995년 3월에 APEC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4월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역내 회원국 자격을 인정받았다. 러시아는 이미 협의 대상국 자격으로 ASEAN에 참가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러시아는 우리 나라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우리와의 수교이후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과거 수준으로 복원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 오고 있다.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1994년 3월 제의한 바 있는 유엔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소집 방식을 주장해 오고 있다.

### 3)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과 Yeltsin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로 규정한 이래 한·러 양국은 양자간 문제에 있

어서는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한·러 수교 5주년을 맞이한 1995년 한 해 동안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양국 주요 인사들의 상호 방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5년 5월에는 Grachev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양국 간 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9월에는 Chernomyrdin 총리가 방한하여 양국관계 발전에 일획을 그었다.

특히 1995년 9월초에 러시아는 1961년 북한과 체결한 조·소(朝·蘇)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을 신조약으로 대체할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한반도 안정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책임을 반영하는 한편,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전전시켜 나감에 있어 새로운 동북아 정치질서와 한·러 관계를 반영한 현실적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1995년 7월에는 Davyдов 러시아 부총리가 방한하여 그동안 한·러 양국 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1995년 한 해동안에도 한·러 양국간의 교역은 활발히 이루어져 1995년도 양국간 교역액은 1994년대비 약 50% 증가한 33억달러에 달하였으며 1996년에는 5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다. 중·동구지역

### 1) 지역정세

1995년중 중·동구 국가들은 체제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극복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정치·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야기된 만성적 인플레, 생산성 저하, 실업률 증가 현상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의 경제는 성장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

다.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 중·동구 일부 국가에서는 구공산세력의 대체세력으로 등장하였던 민주정권의 무능력과 지도력 상실로 인한 분열, 개혁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미진 등으로 인해 공산세력이 재등장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정책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냉전체제하에서 다양한 민족을 강제적으로 결합시켰던 공산주의 독재체제가 와해되면서 폭발된 중·동구 지역의 민족주의 욕구는 이 지역 정세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스니아 사태외에도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내 헝가리 소수민족문제, 불가리아내 터어키계 소수민족문제, 루마니아·몰도바 통합문제, 신유고 연방내 코소보 독립문제, 마케도니아 국호문제 등 지역 국가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중·동구 국가들은 서구로의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6개국이 구주연합(EU)의 준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EU로의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체코는 1995년 12월에 중·동구권 국가중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NATO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는 NATO와 '평화를 위한 동반자(Partnership for Peace : PFP)' 관계를 수립하여 중·동구 지역의 안보를 도모하는 한편 구주안보협력기구(OSCE)와 서구동맹(WEU)에도 참여하는 등 다면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2) 보스니아 사태

3년반 이상 계속되어 온 보스니아 내전으로 유럽지역에 대규모의 난민

이 발생하고 인권 유린의 참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보스니아 사태 해결 노력이 미진한 데 대해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미국이 1996년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간 외교적 실패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보스니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코자 함에 따라 보스니아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Holbrooke 미 국무부 차관보의 내전당사자간 적극적인 왕복외교에 힘입어 1995년 11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및 신유고연방 대통령은 미국 Dayton 공군기지에서 보스니아 회교도-크로아티아 연방과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공화국간에 51 : 49의 영토분할을 기초로 1국가 2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스니아 내전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가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파리에서 정식 서명하였다.

이러한 평화협정의 서명으로 보스니아에 평화의 서광이 비추었으며 내전당사자들이 이 평화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때 보스니아, 나아가 발칸지역에 평화가 정착되고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95년은 중·동구권 국가와의 정상외교가 활발히 전개된 해였다. 1995년 3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였으며, 1995년 4월에는 불가리아의 Zhelev 대통령, 그리고 1995년 12월에는 헝가리의 Horn 수상이 방한하여 중·동구 지역 주요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고 실질협력 관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밖에 1995년 5월 Serequi 알바니아 외무장관이 방한하여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중·동구 국가들은 짧은 수교역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등 친한정책을 견지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1995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1996-97년도 임기의 유엔안보리 비상

임이사국으로 선출되는 데 있어서도 적극 협조해 주었다.

또한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중·동구지역 국가들은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 등을 적극 요청하는 등 우리와의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꾸준히 희망하고 있다.

1995년의 우리 나라의 대중·동구 교역량은 대략 22억달러 정도로 우리 나라의 전체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중·동구권 국가와의 교역량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중·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과도기적 경제 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중·동구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우리 나라의 이들 국가와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중동·아프리카지역

##### 가. 중동지역

###### 1) 지역정세

냉전시대 반세기동안 미국과 구소련의 대결구조하에서 분쟁과 갈등관계를 보였던 중동지역에 1995년에 들어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특히 냉전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분쟁국간의 평화협상을 주도함에 따라 과거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평화와 영토의 교환(Land for Peace)’ 원칙하에 추진되어온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분쟁당사국과의 평화협상은 1995년 9월 2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간 2단계 자치이행 협정이 체결되어 팔레스타

인 자치가 요르단강 서안까지 확대됨으로써 큰 진전을 보았다.

1995년 11월 4일 중동평화를 적극 추진해 온 Rabin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되어 중동평화 협상 전도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Rabin 총리의 영결식에 미국을 비롯한 이집트, 요르단의 국가원수와 모로코, 오만, 카타르 등의 각료급 인사가 조문사절로 참석하고, Rabin 총리의 뒤를 이은 Peres 총리가 이스라엘군의 요르단강 철수일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평화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오히려 평화협상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1994년 10월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교통, 무역, 치안 등 각 분야의 협정 체결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시리아간 평화협상도 이스라엘-PLO간 자치확대 협정 체결후 미국, 이집트 등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1995년 12월 재개됨으로써 중동평화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한편 중동지역의 경제·사회 개발을 통해 중동평화 정착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바, 특히 1994년 10월말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중동·북아프리카 경제정상회의에서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이 600억달러 이상의 개발계획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개발은행, 기업이사회, 여행관광연합회 등 역내외 국가간 협력 촉진을 위한 기구설립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시리아간 협상은 골란고원 반환에 따른 안전보장 및 수자원 관리권 문제로 난항이 예상되며, 이스라엘과 레바논간의 평화 협상은 개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카타르, 오만과 이스라엘간의 무역대표부 개설 추진 등 이스라엘과 일부 온건 아랍국가간 부분적인 관계개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중동평화 달성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알제리, 수단, 이집트 등에서의 회교원리주의의 확산과 1995년

6월 이디오피아에서 발생한 Mubarak 이집트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을 둘러싼 수단·이집트·이디오피아간 분쟁, 이라크·쿠웨이트간 전후처리 및 배상문제,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이란간, 그리고 예멘과 에리트리아간 도서영유권 분쟁은 잠재적인 역내 안정 저해요인으로 남아있다.

한편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로 이라크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제재완화를 지지하는 유럽, 중동 국가의 온건론과 제재 지속을 주장하는 미국, 영국의 강경론이 대립하였으나 1995년 8월 Saddam Hussein 이라크 대통령의 사위인 Kamel 장군이 요르단으로 망명, 이라크의 비밀무기 관련 정보를 폭로함으로써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다시 우세해지고 있고, 요르단이 그동안의 대이라크 우호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이라크의 고립이 심화되었다.

이란은 Rafsanjani 대통령이 1992년 5월 총선이후 온건 다수파의 지원을 배경으로 추진해 온 실용주의적 경제 및 대외정책이 실패하여 강경 보수파와의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미국이 이란의 국제 테러지원을 이유로 1995년 5월이후 대이란 경제제재를 단행하여 이란이 당면한 경제 난을 타개하기가 어려운 설정이다. 이란은 이러한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들어 중앙아시아지역 이슬람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2) 우리 나라와의 관계

중동지역은 1970-80년대 우리 나라의 최대 건설 시장으로서 1995년 말 현재 해외 건설수주 누계 총액의 3/4인 90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매년 국내 원유소비량의 약 80%를 이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들어 우리 나라의 전체 교역량 증대, 동남아 시장의 활성화, 원유가의 안정 등으로 한·중동 경제관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중동간 교역량은 완만하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대중동 경협관계를 확대시키려는 노력도 지속되어 1995년 9월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에너지사절단이 사우디,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을 방문하였다.

#### 〈대 중동지역 총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1992		1993		1994		1995	
전 체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76,632	81,775	82,236	83,800	96,013	102,348	113,430	123,319
중 동	3,606	8,751	3,589	8,661	3,869	9,129	4,384	10,647

#### 〈대중동 원유도입 현황〉

(단위 : 백만배럴)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전체	399.3	509.4	560.6	573.7	624.5
중동	294.4 (73.7%)	380.5 (74.4%)	430.9 (74.7%)	439.8 (76.6%)	486.1 (77.8%)

※ ( )안은 전체 원유도입량중 점유율

한편, 우리 나라는 1961년 영사관계를 수립한 이래 30년동안 공식 외교관계가 없었던 이집트와 1995년 4월 13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 53개 국가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우리와의 공식적인 관계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이집트와 실질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대중동 및 대비동맹 외교에 타격을 주었다. 또한, 1995년 9월 26일에는 레바논 내전으로 철수했던 주레바논 대사관이 복귀하였다. 그러나 중동지역에서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의 관계개선 문제는 우리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 한·시리아 수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대시리아 수출이 1993년 142.9백만달러에서 1995년에는 244.2백만달러로 증가하였고, 시리아내에서도 우리와의 수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한·시리아 수교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

중동평화 정착과정의 진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1994~98년간 1,500만달러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지원키로 약속, 보건분야 의료 기자재 등을 공여하여 이를 이행중이며,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개발은행과 중동 담수화 연구소 설립에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중동평화 지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동지역이 우리의 원유 도입의 약 80%를 점하고 있는 점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감안하여, 앞으로 중동평화 정착지원과 중동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나. 아프리카 지역

### 1) 지역정세

1990년대 들어 동서 냉전 종식에 따른 전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간에도 다당제 도입, 자유선거 실시 등 개혁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루안다, 부룬디, 라이베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과거 억제되어 있던 종족간, 지역간 반목 및 구집권 세력과 개혁 세력간의 대립이 유혈 충돌로 확대되어 새로운 과도기적 정세불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지중해를 마주보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현재 서부사하라 문제의 교착, 유엔의 대리비아 제재, 알제리 사태의 지속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불안한 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부사하라 문제는 주민투표 참가자의 범위를 둘러싼 모로코와 폴리사리오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MINURSO)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리비아는 유엔의 1, 2차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과의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유엔의 대리비아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제재 해제를 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1992년 1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알제리 사태는 그간 군부 측과 반정부 이슬람 회교주의 세력간의 대화시도 등의 타협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간의 근본적인 입장차이로 인해 사태안정을 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서부아프리카 지역은 프랑스의 영향으로 비교적 일찍 민주화를 이룬 국가군(세네갈, 코트디브와르, 가봉, 카메룬, 말리)과 식민지적 유산, 내전, 군인폭동 및 쿠데타 등으로 아직도 정세가 불안한 국가군(라이베리아, 토고, 니제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감비아, 차드, 중앙아, 기네)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주의가 종식되고 1994년 5월 흑백 연립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아프리카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한 남아공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냉전 종식이후 역내분쟁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 문제해결’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등을 통한 역내분쟁 해결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OAU는 자체의 분쟁

조정, 방지 및 해결 기구로서 각종 역내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기경보제도(Early Warning System)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ECOWAS는 휴전 감시를 위해 라이베리아에 병력(ECOMOG)을 파견하고 있다.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비옥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기후환경, 빈약한 사회간접자본, 숙련 노동자의 부족 등으로 인한 저성장, 외채누적으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다.

1990년대 들어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협조로 시장경제화 계획에 따라 국영 기업의 민영화,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재정위기 타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이와 달리 마그레브 지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지하자원, 해양부존자원 및 방대한 건설시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전세계적인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지역경제협력체의 활성화 및 부활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북서아프리카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기구인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CFA 프랑화를 사용하는 서부아프리카지역 7개국간에 '서부아프리카경제통화연맹(UEMOA)'을 성립시키는 한편, 1998년 1월 1일까지 역내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노력중이며 1996년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경제통합 일정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부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이 1994년 8월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에 가입함으로써 남아프리카 12개국 상호간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며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3국은 1993년 11월 '동부아프리카공동체(EAC)' 부활에 합의하여 경제, 사회,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지역협력체 강화 움직임은 지역간 교통시설의 미비, 저소득, 1차 산업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2) 우리 나라와의 관계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말리, 부르키나파소, 이디오피아,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토고 등은 과거 사회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친북정책을 고수하여 왔으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유엔가입 지원을 비롯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최근 친한정책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투자진출 및 기술협력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우리 나라와의 실질협력 관계 증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에 도착한 Mandela 대통령 (95. 7. 7, 청와대)

우리나라는 짐바브웨와 1994년 11월 18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1995년 10월 9일 수도 하라레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세이셸과 1995년 1월 29일 외교관계를 재개함으로써 사하라 사막 이남의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1995년 5월 유엔 아프리카 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 UNECA)에 20만달러의 협력기금을 전달하였고, 1995년 6월에는 아프리카단결기구(OAU)에 평화기금으로 5만달러를 지원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지원 사업은 OECD가입으로 공적원조가 증액될 경우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중 우리의 대아프리카 교역량은 대략 32억달러 정도로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아직 미미한 규모이나 앞으로 아프리카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사회적 불안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이들 국가와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이후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 구도내에서 아프리카 제국의 위상하락에도 불구하고 유엔 등 다자외교 활동의 주요 대상으로서의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차산품의 주요 공급원, 상품시장 및 경제진출 대상으로서의 아프리카 대륙의 비중을 고려하여 1960년대 이후 남·북 대치상황하의 주요 외교활동 무대였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우리의 기존의 외교적 투자를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분야의 실질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